

□ 인터뷰 / 정부 여성정책 10대과제 초안작업 참여 **조은씨** 95. 10. 15

“선거용이라도 좋은 기회”

고용할당제 첫모델 제시 의의...여성계 감시활동에 성패달려

김미경 기자

“이제 공은 여성계로 넘어왔습니다. 기본 토대는 만들어진만큼 이젠 정부가 제대로 지켜나가도록 촉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10대 과제’ 초안작업과 각 부처들과의 협상 과정에서 맹활약해 10대 과제에 여성계의 목소리를 상당부분 담아내는데 큰 구실을 했던 동국대 사회학과 조은 교수를 14일 만났다.

지난 6월 정부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마련작업 시작때부터 세계화추진위원회 외부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조교수를 통해 10대 과제가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의의, 한계점, 앞으로의 과제 등을 들어본다.

-이번 과제가 갖는 가장 큰 의의는.

=공무원 5·7급 부분에서 98년까지 15%, 2000년까지 20% 고용목표제가 설정돼 우리나라 여성고용할당제의 첫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이 가장 의미가 있겠지요. 그리고 모성보호비용을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당비율이 연도별로 제시되지 못하고 모성보호비용도 어떻게 조달해야 할 지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대통령에게 획기적인 여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하고 8월중순께 여성정책안이 나온 뒤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2일 차관회의에서 확정될때까지만 해도 연도별 여성고용할당비율이 정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차관회의 이후 재정경제원 등의 반발로 뒤집어지기 시작해 발표 하루이틀을 남겨두고는 거의 할당제가 수용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모성보호비용의 국가부담 문제도 처음에는 모성보호기금을 조성하자는 안이 나왔었지만 관계부처들이 팔뚝팔뚝 뛰어 구체적인 조달방법이 제시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젠 여성계가 대책위원회를 꾸려 할당제 법개정을 빨리하라고 촉구하고 모성보호기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요구해야지요. 할당제도 정부가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밝혔기때문에 그 비율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점검해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야 합니다.

-여성계가 어떻게 해나가야 할 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학계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정부내의 일을 해보니까 여성계의 정책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됐습니다. 할당제 이야기가 나왔을때 사기

업들은 당장 사기업에 할당제를 적용하려는 것이 아닌데도 자신들에게 미칠 파급효과를 미리 간파해 적극적으로 재경원 등에 반대 로비를 펼쳤습니다. 여성계도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어떻게 의견을 내야할지 등의 협상술을 적극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여성정책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위해 좋은 것이라는 논리를 개발해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벌써부터 할당제가 여성에 대한 특혜라는 등 반발이 만만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예상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부처에서의 반대도 이런 점을 고려해서였겠지요. 할당

제 뿐 아니라 모성보호비용의 의료보험에서의 총당 등은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정부가 바람직한 사회변화를 위해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활용과 모성비용의 사회공동부담 등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확신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합니다. 모성비용의 사회공동부담이 자칫 생리휴가나 출산휴가의 무급화에만 그치지 않고 제대로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재촉하는 일이 여성계의 중요한 몫입니다.

-이번 안이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선거용이 전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줄 수 있는 기회라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청와대 수준에서 획기적인 여성정책을 내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은 처음이며 여성계가 뭘 얻을 수 있다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